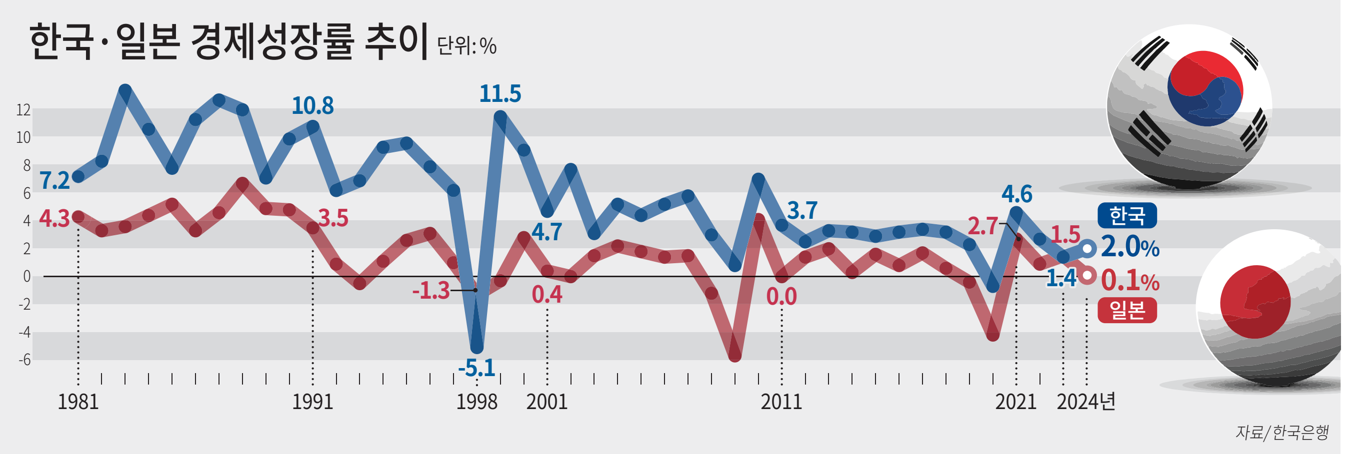
韓, 日 구조적 문제 답습… '잃어버린 30년' 재현되나

긴급점검 이제 내리막길인가

고부가산업 중심 구조개편 지지부진
고령화 지속… 성장 잠재력 떨어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힘 모아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에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은 진정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사회에서 언제 배제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의 풍요로움은 실은 뿌리가 없는 사상누각(沙上樓閣·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멀쩡해 보이지만 토대나 기초가 부실한 존재)에 불과하다."(데루오카 이쓰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1980년대 말 거품경제가 꺼지기 직전, 일본사회는 이 책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잃어버린 3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졌다.

198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던 서독과 일본에 대해 환율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일본 엔화는 실질환율 기준으로 미국 달러 대비 40% 평가 절상됐다.

당시 일본은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거품이 꺼질 즈음 올린 금리는 가계·기업의 부채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이끌었고, 침체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파악한 정부는 재정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쓰며 부채를 키웠다.

그 당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1980년 8.9%에서 1990년 11.9%, 2000년 17% 2010년 22.5% 2020년 28.4%로 늘었다. 1980년대 고령화 사회, 2010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출산율은 1980년대 1.75명에서 2000년 1.36명→2020년 1.34명으로 줄었다. 경제를 이끌 노동력(경제활동인구)이 줄어드는 가운데 되레 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주력 산업의 쇠락과 생산성 저하 문제도 한 몫 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행한 미·일 반도체 협약으로 성장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5년께 미국을 능가하자 덤핑과 진입장벽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10여 년에 걸쳐 체결된 협약들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이다.

◆ 韓, 정착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1.9%)과 비교해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10.1%에서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5%, 2024년 2%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전 만큼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0.8%, 2020년 15.7%, 2024년 19.2%를 기록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75명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돌고 있다.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출생률은 2024년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더딘 상태다.

한국은 196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로 제조업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4%)의 두배에 달한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상위 13대 품목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 중에서도 61.8%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수출범위를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후진적인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한국 57%, 일본 69.5%, 독일 62.9%, 미국 77.6%, OECD 평균 71%다. 한국 내 일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열악한 생산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진입했다고 지적한다. 피크코리아는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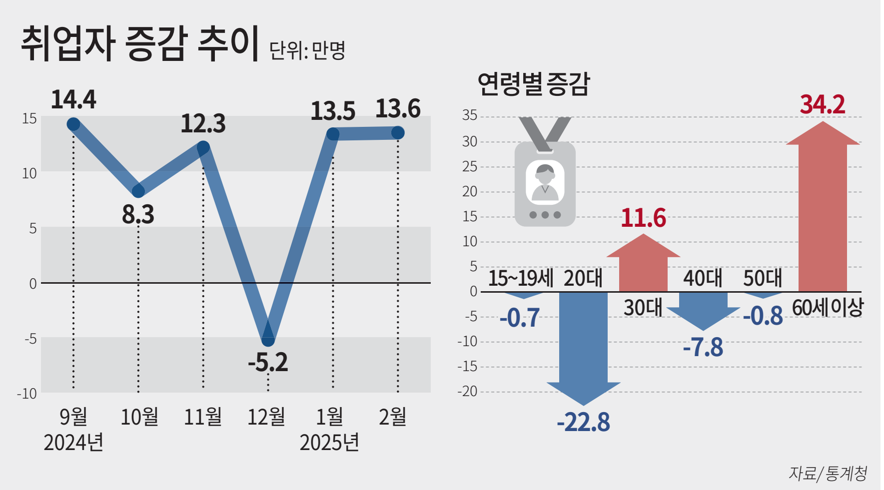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지난 30년간 대통령 임기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씩 대세 하락해 왔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5~29세 취업자 급감… 청년층 '쉬었음' 인구 50만명 돌파

무너지는 고용시장

지난달 청년층 확장실업률 17%
기업 경력직 선호 경향 등 영향



일할 능력은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층 인구가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대에 달했다. '더 나은 곳에 취업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그냥 쉰 것이다. 15~29세 취업자수 감소 폭(-23만5000명)은 4년 1개월 사이 가장 컸다. 또 지난 2월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29세 이하, 40대, 50대에서 감소하는 등 60세 미만 중 유일하게 30대만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0.5%) 늘었다.

그러나 세대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수는 15~29세 나이대에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23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40대(-7만8000명, -0.6%)와 50대(-8000명, -0.1%)에서도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30대(+11만6000명, 1.1%)와 60세 이상(+34만2000명, 0.9%)에서는 늘었다.

특히 15~29세 중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3.8%나 증가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체감실업률이라 불리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역시 청년층에서 악화됐다. 확장실업률은 실업자뿐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부분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 등을 포함해 범위를 넓힌 실업률 지표다.

2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7.1%로 0.7%포인트(p) 올랐다. 이는 2023년 4월(17.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의 분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경향, 수시채용 증가 등도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건설업(-16만7000명, -8.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만4000명, -5.4%), 제조업(-7만4000명, -1.7%), 도소매업(-6만5000명, -2.0%)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 6.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명, 5.7%), 정보통신업(+6만5000명, 5.9%),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3.0%), 금융및보험업(+2만9000명, 3.8%) 등에서는 늘었다.

도소매업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째, 건설업은 10개월째, 제조업은 8개월째 취업자 감소세를 지속했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3000명(1.4%), 임시 근로자는 3만6000명(0.8%) 증가했지만 일용 근로자는 9만2000명(-10.5%)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한상의,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 조세제도 개선 촉구

상법 개정안 도마위

정부·국회에 개선과제 건의서 제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정부와 국회에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 취지에 대해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서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주주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 5% 세액공제' 신설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대기업은 현재 법인세 외에도 추가로 20%의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배당도 투자·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최고 45%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금융소득세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9%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도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처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현금 환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는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자 상태에서는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프랑스처럼 미사용 세액공제를 제삼자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